

광남시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란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하며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시민권의 바탕이 된 교육은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토대로써 헌법이 지켜주는 권리고 의무면서 그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나 위정자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살아 가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 나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권이 주장한 정치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고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시민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전세 문제가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것은, 특히 청년들에게 ‘전세’는 단순한 주거형태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삶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월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자립에 대한 열망, 그 모든 것이 ‘전세’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다. 하지만 그 꿈을 노리는 것이 바로 나쁜 어른들이 만들어낸 ‘전세사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3만 400건에 달한다. 이 중 무려 75%가 청년층이다.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은 청년에게 생애 첫 자산이다. 그러나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방심 속에서 그 전 재산이 한순간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강통전세’다. 집값보다 보증금이 나 대출금이 더 많은 구조다. 예를 들어 집값이 4억 원인데,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게다가 임대인이 대출을 먼저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경

사회통합이고 협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과 균형 사회를 가꿔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부터 검토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는 동반성장·균형발전을 이루며 사회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3일 시대정신과 역사 발전을 저버린 그들만을 위한 망상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면서 생각조차 싫은 혼돈의 기간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세상 그리워하며 나라으로 떨어지려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엄동설한에도 빛의 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20여일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아직은 이르지만, 열심히 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변화의 시대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기존의 가치를 흔들거나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려하는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뿌리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따른 개성적인 인간을 기르고, 사회적 자원에서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적·출세 지향적인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아동독본과 국내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보면, 선택하는 힘 즉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상황이나 불의에 맞서 자기의 생각을 옹기 있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 대화와 토론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꾸준히 실행할 수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힘이 된다.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민주주의를 활짝 펼치도록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 국회까지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시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때 절대권력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정국에서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이 깨어날 때 국민주권은 살아 움직이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전세사기 예방, 청년이 알아야 할 생존 기술

우,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다. 아무리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봤다면 보증금은 날아간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이 있다. “등기부등본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이상 없던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도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청년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남도 건축개발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요즘은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앱(안심정보 앱 등)이나 포털에서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유튜브에도 전세 체크리스트 영상이 넘쳐난다. 그리고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061-288-8424/1551-8424)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청년이라서 몰라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 경·공매 일시 중단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도 자체 예산으로 피해 청년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는 이 모든 조치가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진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

다.

문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까지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발생할 피해는 제외된다. 또한, 피해자 인정률도 2023년 7월 94.1%에서 작년 12월은 49.7%로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이 예방 교육이다.

다행히 전남도주거복지센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광양시에서 열린 청년 130여 명 대상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단체·회사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라.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인생의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요즘 청년들에게 ‘내 방 하나’가 소중하다. 그 방이 사기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은 꼭 체크하자. 이것은 부동산 공부가 아니라, 청년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전세사기는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오늘 하루 10분, 전세사기 예방법을 검색해보자. 그리고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자.

그 선택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것이다. 뉴스 속의 피해자가 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작하자.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의 명칭은 ‘부끄머니’.

선불카드형 화폐로 현재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의 디자인을 결정. 최종 검토 중이다.

모집된 가맹점 수는 6300여개이며,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총 1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은 하루 빨리 부끄머니가 발행되길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폐이백 사업 등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북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가 지역 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9월까지 3개월 가량 남았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추석 전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얼굴에 환박웃음이 지어지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사설

AI 2단계 ‘AX실증밸리’ 정부 지원 절실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조성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AI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키로 한데다 정부도 최근 AI·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에 1조2000억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광주시 AI 1단계와 2단계를 잇는 브릿지 사업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실 광주 AI 중심도시 도약은 광주시가 꿈꾸는 미래 먹거리이자 최대현안이다.

2018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토록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관행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 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는 유일하게 R&D사업인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2019년 1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막대한 인프라 예산을 마다하고 택한 게 AI라는 얘기다.

이후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95억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추진,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에 ‘AI 집적단지’(4만7246㎡)를 조성했다. 즉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기술, 인력, 실증환경 등 핵심 인프라 자원을 한곳에 집약해 AI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한 AI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다행히도 내란과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광주시의 AI 2단계 사업은 정부의 1차 추경에 일부가 반영됐고 조기 대선 판이 열리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AX(AI Transformation)는 산업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AI개발과 인프라 확보에 집중했던 1단계를 넘어서 실제 업무와 산업의 현장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AI 선도도시 광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AI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 등도 절실하다.

고령사회 전남, 마을 공동빨래방 뜬다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또는 기초 자치단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동빨래방’이 인기가 높다. 고령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전남 마을 공동빨래방’은 가부자가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 협력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해 세탁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45%인 완도군 청산면에서 첫 공식 빨래방이 문을 열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110가구, 360여명에게 ‘이불 빨래원스톱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남면, 강진군 성전면, 함평군 함평읍 등 4곳에서 운영 중인데 호응이 높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8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3월 지자체 설립 첫 ‘공동빨래방’인 사평 빨래방을 개소했다. 이 역시 전체 주민의 30%에 이르는 65세 이상 노인 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50kg의 대용량 세탁기 5대와 건조기를 갖춰 하루 120채의 이불을 세탁할 수 있는 이곳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건립비 10억원을 지원했고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도 2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했다. 현재 3대의 전용 차량으로 화순 전역 299개 마을을 차례로 돌며 수거·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탁비로 겨우 이불 1채당 1만원, 그 외 이불은 1채당 5000원을 받지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라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51.7%로 해남군 내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면도 지난 2023년 5월부터 ‘뽕송뽕송 이불 빨래방’을 열었다.

대형 세탁기 1대와 건조기 1대를 갖춘 작은 빨래방은 한 달에 40여명 정도가 이용한다. 이웃들이 거동 불편 노인들의 빨래를 대신해 주고 배송 과정에서 안부까지 확인해 주고 있다.

‘마을 공동빨래방’이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촌 지역 ‘필수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